

“조승희 고교시절 ‘왕따’였다”

NBC방송, 특이한 발음 때문에 따돌림 당해

“올드보이” 등 영화 장면 모방 범죄 주장도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 범인인 조승희(23)씨가 고교시절 동료학생들 사이에서 수줍어하는 태도와 특이한 발음을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었다고 동창생들이 전했다.

조씨의 웨스트필드 고교 동창생인 크리스 데이비스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그가 결코 입을 열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해도 무시했다고 전하면서 학교 영어수업중에 조씨가 놀립니다는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한번은 영어 수업시간에 소리를 내서 크게 일어나는 차례가 됐는데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래만 바라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수업점수 'F(에프)'를 주겠다고 하자 꼭 입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특이하고 낮은 목소리로 익기 시작했다. 그때 학급전체가 웃음바다가 되면서 '중

국으로 돌아가자'라는 힐난이 쏟아진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총격사건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년에 출연한 웨스트필드 출신 학생들이 2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씨가 그들을 찾아내 사살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조씨가 또 대학 때도 특이한 행동을 보여 의문부호같은 녀석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대학동창들이 전했다.

조씨의 중·고교 동창이면서 버지니아공대를 함께 다녔던 레이건 외일다는 대학에 오기 전에도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면서 거의 말을 건네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정말 낮은 소리로 속삭이듯 웅얼거렸는데 대학에 와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내가 곁에 없는 것처럼 지나쳤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씨 부모 FBI 신병보호

조씨누나 “죄책감…사과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승희의 누나가 모교인 프린스턴대학 기독교 모임을 이끌던 한국계 목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프린스턴대학 신문 ‘데일리 프린스턴’이 19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프린스턴대학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모임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김 목사는 “조씨가 동생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그 일로 인해 프린스턴대학 내 한국인들이 받았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누나 조씨는 미국 정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범인 조승희 부모의 신병을 보호증입을 공식 확인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권태면 총영사는 이날 FBI 워싱턴 국지조지 페시치니 부국장과 만나 조씨 부모와 누나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 설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상생 말뿐인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117개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1·4분기 경영애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난의 원인으로 응답업체의 39.2%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끊었고, 대기업 납품물량 축소 27.5%, 대기업의 대금결제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7.2% 등 대기업 관련 사항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단은 26.1%에 지나지 않았다.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협력업체의 납품가에 반영해 주지 않다가도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내리기거나 무섭게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심지어 요즘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마저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법·제도 정비해 장애인 인권보장해야

20일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1981년 제정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일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완비돼 장병들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24개월을 기준으로, 장병들은 최대 12학점을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병역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이날 부로 모두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장병들은 3가지 방법으로 복무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우선 대학을 다니다 군 복무로 휴학중인 장병들은 소속 대학이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관련 예산도 떡없이 부족하다. 광주·전남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20일 광주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3%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예산 대부분도 사회복지사 수당과 중증장애인 수당으로 일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에게 대비해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회 확대, 이동권 보장, 의료혜택 및 재활병원 확충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없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 줄이자” 한국·중국·일본 지자체의 환경단체들이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한·중·일 CO2 다이어트 선언’을 했다. 왼쪽 앞줄부터 박경린 푸른광주21 상임회장, 리리 중국환경우호공익협의회장, 하로시 오카자키 일본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20%를 립’ 대표,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대형업체 150억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

건교부, 내달부터 제한…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율도 30%로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혁신도시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 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를 대형 업체들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도는 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발주하



“대선자금 수사 때 중수부 폐지 ‘압력’”

송광수 前총장 “노 대통령 측근들 ‘검찰 손봐야 한다’며 반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대선 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한 노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송 전 검찰총장은 20일 송설대에서 가진 ‘교정복지론’ 강의에서 “노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자금 수사 때 대검 중앙수사본부(중수부)가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법무부(당시 강금실 법무장관)도 폐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송 전 총장은 “중수부에 정보를 넘기는 대검 범죄정보실의 폐지론도 불거져 법무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이 당시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고 그만 두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냈다”며 “그러자 측근들에 게서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송 전 총장은 대선 자금 수사에 앞서 터졌던 ‘나라종금 불법 보비’ 수사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나라종금 불법 보비’ 사건은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종금이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정관계 보비 의혹 사건이다.

/연합뉴스

통합신당 창당 무산

신당모임, 합의 번복 독자창당 수순…민주당 통합논의 재검토

신당모임과 민주당이 통합신당 창당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대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합 신당 창당이 무산됐다.

특히, 통합신당모임은 당초 다음달 6일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던 민주당과의 합의 사항을 번복하고 독자 신당 창당 이후 통합신당 창당을 주장, 협상 결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통합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통합신당모임은 20일 오전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정치관 인파 인사 24명(국회의원 10명+외부인사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도 개혁통합신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신당모임은 2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6일 강원, 충북도당 창당을 시작으로 30일 까지 10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내달 6일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독자창당 일정을 재확인했다.

신당모임이 독자창당 수순을 밟음에 따라 민주당도 이날 오전 통합추진위 회의를 열어 통합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 범위와 대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의 통합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결국 지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신당모임은 ‘도로 민주당’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심으로는 통합신당에서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지분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외부세력 3인 공동대표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신당모임과 민주당 모두 통합신당 창당 협상의 문호는 열어놓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차이가 큰 데다 합의의 무산에 따른 후유증도 큰 만큼 당분간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회원들은 대선의 효율적인 취재 보도를 위해 오는 6~7월께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과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3~4회 공동 실시해 지역별로 대선주자들의 정확한 판세를 짚증 보도하기로 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한가지 이슈를 정해 대선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약검증단을 운영하며, 대선주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회원사들이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일보

회장 許宰皓		기자·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실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登記번호 광주기 1
대표전화 2200-500-222-8111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기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919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광고국 2200-521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조사처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디자인 2200-536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서 부	2200-570	시 앱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